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집중'

김승수 전주시장, 국회서 김재원 예결위원장 등 찾아 국비사업 증액 당위성 피력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전주 발전을 이끌 내년도 국가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20일, 2020년도 국가예산 배정을 위한 예결소위심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방문해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과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등을 각각 만나 국회 예결위 심사에 상정된 전주시 국비사업의 감액 방지 및 증액을 위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후 추가 반영된 △전주 로파크 건립(10억)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130억)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3억)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3억) △시정주도형 드론 소재부품 육성사업(10억) △기저지 어린이 생태체험장 조성(7억) 등 주요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면담에는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김승수 전주시장은 20일, 2020년도 국가예산 배정을 위한 예결소위심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방문해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비사업 증액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향후 진행되는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 대비해 전북도와 지역정치를,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예산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실·순창)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증액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들이 예결위 단계에서 소외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향후 진행되는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 대비해 전북도와 지역정치를,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예산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사랑의 연탄 배달 갑니다” 전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전북동 일원에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전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및 한국노총 전북본부 자원봉사연합회 봉사자, 전주사회회 박선전 의원(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등 30여명은 전북동 관내 어려운 이웃 5가구에 연탄 1500여장을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산단 주변·달동네 '살기 좋은 마을'로

전주시, 팔복·승암·도토리골 등 3곳 대상 새마을사업 전개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이었던 산단 주변마을과 달동네, 침수지역이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되고 있다. 전주시는 팔복동 추천대교 인근 '팔복새마을' △교동 '승암새마을' △진북동·중화산동 '도토리골새마을' 등 도시 곳곳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마을사업이 추진되면서 과거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인프라 부족했던 해당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사업은 기존의 개발사업과 달리 실거주자 중심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하는 주거환경 재생사업으로,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의 자생력 강화를 이뤘다. 지속적인 자활마을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지난 2015년부터 국비 50여억원 등 총 71억5800만원이 투입된 팔복새마을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전주를 먹여 살린 팔복동 산단 인근에 위치해 분진과 악취 소음 등의 고통을 호소했던 주민들은 주민역량강화사업과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마을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통해 생활 여

건이 나아지고 있다. 팔복동 추천대교 주민들은 새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김 폐·공가를 철거한 부지에 허브밭을 조성해 허브를 심고, 수확한 허브로 허브차를 만드는 등 새로운 소득창출 방법을 익혔다. 또, △경로당 신축 △마을공동인프라 구축 △공동이용시설 신축 △마을진입도로 개설 △집수리사업 등이 추진돼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팔복새마을사업은 생활도로 확장 등 일부 인프라 구축사업만을 남겨두고 있다.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도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인 새마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희망의 생태터로 바뀌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28억여원 등 총 40억6200만원이 투입되는 승암새마을은 교동 승암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 △생활도로 개설 △집수리 △주민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방 이후 다가산과 점주천 사이 다랭이 논에 난민들이 삼삼오오 거주하면서 조성됐지만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진북동·중화산동 도토리골

마을도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0억원 등 총 42억8600만원이 투입돼 새마을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일 도토리골 경로당에서 도토리골 새마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의 수립 목적과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친절교육 실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20일 이용객들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에듀인너스 교육컨설팅 손예진 강사가 '마음이 통하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주제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이날 교육에는 현장 필수 인력을 제외한 6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 강사는 동기 부여를 위한 나와 동료, 고객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심을 통한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CS(Customer Satisfaction)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상 기자



걸을수록 '매력 만점'

전주한옥마을 골목길·담장 시, 거리 풍경 정비 등 추진

전주한옥마을의 골목길과 담장 등이 걷기 좋은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다.

전주시는 국내 다른 여행지에서 볼 수 없는 전통문화도시의 품격을 지닌 전주한옥마을의 매력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한옥마을 곳곳에 친환경 화분과 아트 벤치를 설치하는 등 걷고 싶은 여행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걷기 좋은 여행지를 만들기 위해 한옥마을 골목길을 걸으면서 만날 수 있는 거리의 풍경들을 정갈하게 정비하는 한편, 차를 타고 가면 볼 수 없는 예쁜 소품들을 곳곳에 설치하는 등 전주한옥마을을 특색 있는 거리로 꾸미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던 최명회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의 환경 정비가 조화를 이루며 여행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골목길로 재탄생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전주한옥마을 최명회 생가터와 최명회 문학관 주변 길에 대형화분 80개를 비치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했으며, 청년 목수와 지역예술가들이

함께 만든 아름다운 아트벤치를 설치해 여행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했다. 아트벤치에는 최명회 작가의 대표작인 소설 '혼불'에 나오는 꽃들과 발체한 문장이 그려졌으며, 주민들과 함께 최명회 생가터 주변의 허름한 벽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또한 시는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로변 불법주정차를 전면 근절시키기 위해 친환경 화분인 나무여물통을 활용한 화분 6개소를 설치했으며, 중앙초 담장주변에는 꽃을 심어 걸을수록 행복해지는 여행지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오목대길 양사재 주변에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청년목수와 예술가가 협업한 아트 벤치를 제작·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여름에는 여행객들이 전통차와 그늘 아래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아트원터 3개소를 설치해 한여름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에게 도보여행 중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주한옥마을을 여행객들의 발길이 상대적으로 상입화된 태조로 중심에서 잘 보존되고 가꿔진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골목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윤상 기자

군산, 화력발전소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법원이 군산시의 시민 건강과 생명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정방향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가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가 내린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이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 처분사유가 부당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군산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하지만 군산시는 시민건강과 생명보호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공공복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에 부합한 시정방향을 추구했다. 특히 보다 큰 공익보호를 위해 이 사건의 불허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 군산시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임무를 고수했다.

이에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에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77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금번 이의신청 대상은 2019년 상반기에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분 977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된 결정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조회는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구청 민원봉사실,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조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에 인터넷 또는 구청 민원봉사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12월 27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아시아기독교병원협회 연례대회 참가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4회 아시아기독교병원협회(Asia Christian Hospital Association, ACHA) 연례대회에 예수병원에서 조진웅 부원장을 비롯한 5명이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화, 아시아 기독교병원의 도전'을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된 2019년 아시아기독교병원협회 연례대회에 예수병원에서 조진웅 부원장과 정선범 원목심장, 고근 홍보과장, 김은실 수간호사, 김민수 간호사 등 5명이 참가해 예수병원과 자매결연 협약으로 인한 연수를 진행 중인 대만 맥케이 병원, 태국 맥코비 병원, 일본 요도가와 병원을 비롯한 아시아 기독교병원들과 친교와 21세기 의료선교의 비전을 나누었다. /김윤상 기자

암관리사업 협의체 회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국가암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간 간 상호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 암관리사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지역암센터 유효철 소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사업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암센터가 추진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전북지역 특성에 적합한 암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지역암센터에서는 2019년 전라북도 암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와 함께 △전라북도 암관리사업 향후 추진 일정 및 방향 △원활한 국가암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연계 및 추진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경로당 지원사업 예산낭비·사후관리 부실”

서남이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주시 양구청의 공기청정기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호도 조사 후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지나치게 비싸게 납품한 것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0일 전주시의회 서남이 의원(우야·2호성동)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의 공기청정기 경로당지원사업이 과다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양구청 소속 경로당을 경로당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 6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부친 후 902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 이번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는 6개 업체에 12억원, 즉 한 업체당 대략 110



대, 1억8천만원어치 정도를 계약해 납품했다. 문제는 물품을 대량 구매하면 가격이 더 저렴해져야 하는데 비싸게 구입했다는 데에 있다. 납품된 제품 중 A 제품의 납품가는 덕진구 96만420원, 완산구 103만1600원으로 나라장터의 동일모델 55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게 구입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캐리어 제품 중 본 가격이 44만4000원인데 완산구 경로당에 130만5720원으로 납품했다. 이처럼 과다집행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 구청은 “이렇게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3년의 유지관리와 무상

필터 교체 등을 납품단가에 포함하여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양 구청은 납품에 앞서 주민센터를 통해 제품 선호도 조사를 한 모델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를 제기한 서 의원은 “한 대를 더 구입하는 비용이 차이나도록 유지관리비를 책정한 것은 터무니 없고, 경로당에 평형도 고려하지 않는 등 무척 구구식으로 진행했다. 최저낙찰률만 적용한 것이 문제고, 계약심사방식을 통하여 실거래가와 여러 상황을 고려 하려면 최소 3~4억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윤상 기자